

추미애·박영선, 당대표후보 단일화 이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박영선 의원이 22일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당대표후보 단일화 논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당대표 선거 후보단일화 논의를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제가 정치를 비판하는 데(비주류)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그런다면 또 계파정치를 왜 하느냐는 오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갑자기 모여서 누구를 밀자고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불식시켜야 될 계파정치를 만드는 원인제 공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김부겸 의원과 단일화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기득권 유착관계 깨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2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경제·법조·교육·언론·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하다. 관공아이에서 폐파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며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는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어야 한다"며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강이 물에 대한 물의 또 다른 물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물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는 폐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기득권들과 싸워겠다.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겠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주 기자

권성동 "절대 안물러나"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탄핵 당한 권성동 사무총장이 22일 여전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경질 발표 시흘째 버티기다.

권 총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변화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뒤, 자신의 경질을 품어온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도 "계속 나와요? 일부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라고 친박 극수수만 자신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23일 비대위 회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성주 기자

추미애 "단일화하면 계파정치 원인 제공"

박영선 "김부겸에게 전대 나오라 제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갑자기 모여서 누구를 밀자고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불식시켜야 될 계파정치를 만드는 원인제 공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김부겸 의원과 단일화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정권교체로 가는 징검다리기 때문에 당대표가 일미만금의 확장성이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3년 민주당 2·8전당대회와 같은 그 후유증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 의원 등 당내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대표로 뽑아선 안 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성주 기자



민주주의회복 TF 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 TF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너무 늦지 않게 대선 출마 입장 밝힐터"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너무 늦지 않게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지사는 22일 충남도청 내 카페에서 민선 6기 중간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제 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고 그동안 고민하고 성찰했던 입장 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그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을 세우다보니 자주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는 것 같다"며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다"고 서론을 꺼냈다.

안 지사는 "불펜투수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내 입후보자 결정시기 확정될 때쯤이 될 것이다. 불펜투수는 감독이 결정하는데 경기흐름을 살펴야 한다"며 "상황과

향편을 보고 저 스스로 구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실력을 갖췄을 때 등판 결정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펜투수 개념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제가 말하는 불펜투수는 보조 개념 아니

다. 특정후보의 대체개념이 아니다. 박원순, 문재인 등 많은 선배들에게 대한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지 보완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의 의지는 분명하다. 지역주의 정치, 20세기 낡은 정치, 표류하고 있는 정치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제가 나서보겠다"며 "상황과 때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자기 검증이다. 저 스스로 확신이 들때 제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퍼력했다.

향편을 보고 저 스스로 구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실력을 갖췄을 때 등판 결정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펜투수 개념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제가 말하는 불펜투수는 보조 개념 아니

다. 특정후보의 대체개념이 아니다. 박원순, 문재인 등 많은 선배들에게 대한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지 보완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의 의지는 분명하다. 지역주의 정치, 20세기 낡은 정치, 표류하고 있는 정치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제가 나서보겠다"며 "상황과 때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자기 검증이다. 저 스스로 확신이 들때 제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퍼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MB 정부에서는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녺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녺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녺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녺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녺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민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치관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 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녺리도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